

‘트럼프 재등장’ 불확실성 해소 됐지만... 박스에 갇힌 증시

KRX, 코스피 소폭상승 2564.63
관세 강화에 수출은 둔화 우려돼
공약 현실화면 강달러 심화 예상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를 짓눌러 온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나 여전히 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관세 강화 등 수출 둔화 우려 확대에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2포인트(0.04%) 오른 2564.63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9.79포인트(1.32%) 하락한 733.52를 기록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트럼프의 재등장에 일제히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코스피가 전 거래일(2563.51)보다 1.12포인트(0.04%) 상승한 2564.63에 장을 마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43.31)보다 9.79포인트(1.32%) 하락한 733.5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6.2원)보다 0.4원 오른 1396.6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에서는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강달러 현상이 심화하고, 채권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여 국내 증시는 당분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승리로 인해 코스피의 약세가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재정정책 중 감세

와 국제 발행을 고려하면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화 약세를 자극해 외국인 매도 물량 출회로 이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로 민간 자금이 말라가고 있어 외국인 투자까지 축소된다면 코스피는 하향 기조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역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의 경우 정치, 경제, 안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관세 인상이 현실

화될 경우 수출 위축이 불가피해 내년 수출 전망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업종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 경기 확장 기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트럼프의 부양·압박 순서, 중국의 대응 부양책 등이 증시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수보다는 업종 대응으로 ‘AI+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우주, 원전, 방산, 바이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 후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업종, 혹은 대선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고대역 폭메모리(HBM), 전력기기 등 인공지능(AI)주, 방산주, 금융주를 대응 업종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트럼프 리더십, 세계 경제번영 기여할 것” “민간소비 증가세 낮아... 구조개혁 필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서한·논평
최태원 “양국 협력기회 창출하고
파트너십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는 등 경제단체들이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아울러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경제인 행사도 주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철통과 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FTA 토대 아래 양국 경제협력도 확대·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경협은 “특히, 양국 경제 관계의 핵

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과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보다 정교한 민관협력체제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미국 상의와 한미간 최고 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의 대표 대미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과학기술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동맹을 한 차원 더 고도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중소기업에도 양국 번영과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DI, 소비둔화 요인과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추세적 둔화 우려
정부소비 확대, 소득증가 연결 안돼”

민간소비가 ‘추세적 둔화’에 접어들었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대를 비롯해 구조개혁 등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난 반면, 국민들의 사회보장기금 부담 등으로 소비 여력이 축소됐다고 봤다.

KDI는 7일 발표한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의 평균 증가율이 1% 안팎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평균치인 2.8%를 하회한 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세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부진에 대해선, 고물가 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명목 총소비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비중이 일정함에도 실질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개인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정부소비의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KDI의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인 김준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정부소비는 소득증가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곧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등 정부지출 확대에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늘어나 민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했다.

2% 내외에 머물고 있는 성장률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잠재성장률과 함께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 것은 물론, 생산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 중후반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재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 가격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민간소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상대가격 변화는 2001~2023년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끌어내렸는데 이는 교역조건 추세의 하락에서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비율 소폭 하락

금감원, 비율 184.3%로 9.4%p ↓

올해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특히 기업집단 중 교보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84.3%를 기록해 지난해 말 193.7% 대비 9.4%p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의해 지정·관리되며 100%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필요자본 대비 통합자기자본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등록된 곳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Dau키움 등 7곳이다.

7개 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178조 5000억원으로 전년말(175조 7000억원) 대비 2조 8000억원가량(1.6%) 증가했다. 통합필요자본은 90조 7000억원에서 96조 9000억원으로 약 6조 2000억원 늘어 자본적정성 비율 측면에서는 하락했다.

통합필요자본은 96조 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조 2000억원(6.8%) 늘었다. 이는 보험계열사 주식위험 등 시장위험액 증가, 해외계열사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필요자본 증가 등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창원공단 논란은 모략... 사과문제 아냐”

» 1면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계속

기자회견 말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 부부의 소통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니 사과했다”면서도 “창원 공단 이런 건(이런 논란은) 사실도 아니고, 모략이기에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